

국정감사에 대한 행정부 설명/해명 내용과 국정감사 개선방향

2016. 10.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김도연



1 들어가는 말

- 매년 정기 국회 개원 후 약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감사기간은 짧은 반면 피감기관은 매년 평균 600여 곳에 달함.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행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지만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이에 각 피감기관에서는 설명 및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리고 있는 실정임
-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지적은 행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설명 및 해명 자료를 통해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국정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설명 및 해명 실태

- 9월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으로 인한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했음. 여당은 10월 4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했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온전한 국정감사 시작되었음.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회가 지적한 실책 중 일부는 사실과 달라 피감기관과 국민들에 혼란을 주고 있음.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교육부 해명자료>

- 더불어민주당 000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모 언론은 교육부가 9월 5일 발표한 대학특성화(CK)사업 재선정평가 선정 결과, 원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탈락대상이었던 사업단(89개 가운데 78곳)을 대거 선정하였다고 지적하며, 전체의 88%가 기준에 미달했지만 사업단별 평균 6억6000만원씩, 총 515억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다고 보도함
- 특히, 영남대의 경우 동일 패널 내 지원한 사업단이 1곳뿐이었는데 과락기준을 적용해 가점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탈락시켰다고 지적함. 가·감점(10점)을 적용한 결과로 선

정 대학이 뒤바뀐 사례도 생겼다고 지적함

- 그러나 교육부의 해명자료를 통해, '16년 CK 재선정평가는 상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점수 60점 미만을 탈락기준으로 정한 바도 없다고 함. 교육부는 또한 대학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점수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해명함
- 가·감점의 경우, 16년 3월 「2016년 대학특성화사업(CK) 중간평가 추진계획」에서 평가점수에 합산되어 최종 선정된다고 공지하였다고 함. 이는 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점을,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여 최종 사업단을 선정하였다고 해명함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 새누리당 000 의원이 지적한 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은 'LH 시행 일부 행복주택 사업지가 기차역·전철역과 멀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며,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의 경우 인구유출이 높은 군단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등 물량 맞추기식 후보지 선정 우려가 된다'고 보도함.
-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행복주택 후보지는 민간 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후보지 선정협의회」 등을 통해 수요 및 입지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되고 있다고 해명함.
- 행복주택 후보지는 민간 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후보지 선정협의회」 등을 통해 수요 및 입지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되고 있다고 함.
- 또한 300곳 이상의 후보지 중 지하철역·기차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전철역과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전반적 교통여건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함.
- 일부 중소도시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사업유치 의지를 전제로 면밀한 수요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함.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주택이 부족하여 젊은 계층이 1시간 이상 떨어진 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이며, 지자체 여건에 맞추어 대부분 소규모로 계획*되어 지역 내 청년 주거수요를 충

분히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함. 아울러 전국 각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일부사업이 인천시, 고양시 등 미분양관리지역* 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젊은층의 주거안정 사다리이자 장기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일반분양 주택과 그 수요계층이 중복되지 않아, 이 지역에 행복주택 공급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합당치 않다고 해명함

<미래창조과학부 해명자료>

- 더불어민주당 000 의원이 제기한 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은 “대통령 지시로 ‘민간연구원’세우며 7개 기업서 총 210억 각출”했다고 보도하면서, 대통령이 ‘민간주도 R&D 방식’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에 연간 150억 원씩 5년간 총 7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를 두고 ‘특혜성 지원’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함.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 지시로 ‘민간연구원’ 세우며 7개 기업서 총 210억 각출”로 보도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함
 -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를 결정했다고 함.
 - 특혜성 지원 관련해서는 지능정보기술은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이며 기술적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적법 절차에 따라 연 150억 원씩 5년간 총 7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이는 연구원을 포함한 산학연에 분산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함.

<행정자치부 설명자료>

- 더불어민주당 000 의원은 ‘행자부가 추심업체 등 민간 기관에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 12억 원을 받고 있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활용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불법 추심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함

- 이에 행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민간에 팔아 12억을 벌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함.
-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출하면 이용목적과 사생활 침해여부를 검토한 후 현주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함
-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며,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전액 배분하고 있다고 함
- 또한 행자부 제공 자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함. 주민등록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이 발견된 경우 동법 제37조6호에 따라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해명함

<고용노동부 보도 해명자료>

- 새누리당 000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중 우리나라는 파견과 용역을 합친 비율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8.9%(‘1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다..(중략).. 고용부의 불법파견 관리 감독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로 이뤄지고 이마저도 원청과 하청업체 간 짜고 치기식으로 진행되는..(중략).. 고용부는 조선업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감독한 ‘04년 이래 한 번도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견, 용역근로자를 합친 비율이 8.9%(OECD 국가 중 1위)라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주장은, 파견근로자(1.1%), 용역근로자(3.2%), 고용형태공시제 상 소속 외 근로자(4.6%) 모두를 합친 것인데, 이는 고용형태공시제 상 “소속 외 근로자”에 이미 파견, 용역 근로자가 포함·중복 계산되어 실제보다 크게 과장된 숫자라고 함
- 아울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자료는 우리나라는 파견+용역+사내하청을 모두 포함하였음에 비해, OECD 국가는 용역과 사내하청을 제외한 순수 파견 근로자 숫자를 제시했으므로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함

□ 이외에도 피감기관의 해명 및 설명자료 배포현황은 【표 1】 과 같음.

【표 1】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부 설명/해명자료 배포 현황
(2016.09.26.~2016.10.04.)

연 번	의원명 (소속정당)	일자	언론사	기사 제목	설명/해명자료 배부 부처
1	유OO (더민주)	09.26	한국일보	朴정부 첫 국정교과서, 1년 만에 139곳 고쳐	교육부
2	노OO (더민주)	09.26	매일경제	‘영터리 대학평가’ 부실대학에 515억 퍼줬다	교육부
3	박OO (더민주)	09.26	동아일보	“대학부패 근절하겠다던 교육부 비리 저지른 32곳 에 올 717억 배정”	교육부
4	김OO (새누리)	10.05	동아일보	“일단 지어놓고 보자?...외면받는 교통오지 행복 주택”	국토교통부
5	문OO (더민주)	09.29	한겨레, 아시아경제	정부부처 출장 보고서 ‘표절’ 심각 (한겨레), 문미옥 의원 ‘미래부·방통위 해외출장 후 산하기관 보고서 표절 만 연’ (아시아경제)	미래창조과학 부
6	이OO (새누리)	09.27	지디넷코 리아	“미래부 산하기관 출원특허 70%는 ‘장롱특허’ ”	미래창조과학 부
7	이OO (새누리)	09.28	아주경제, 이투데이, 연합뉴스	“미래부 수십억 들인 앱,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 혈세낭비”(아주경제) , 이은권“미래부, 수억원 들인 앱 관리부실로 폐기”(이투데이)	미래창조과학 부
8	김OO (더민주)	09.29	경향신문	대통령 지시로 ‘민간연구원’세우며 7개 기업서 총 210억 각출	미래창조과학 부
9	김OO (더민주)	09.30	한겨레	‘생활고 자살 송파 세모녀 이후, 복지 사각지대 21 만명 찾고도 지원은 13%뿐’	보건복지부
10	남OO (더민주)	10.02	연합뉴스	““빈곤층 노인,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 42만명 되 돌려줘”	보건복지부
11	인OO (더민주)	09.26	파이낸셜 뉴스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중 금연 성공률 0.5%	국민건강보험
12	이OO (정의당)	09.29	이데일리	중노위 고용부 달리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	고용노동부
13	이OO 한OO (더민주)	09.30	한겨레, 경 향, 파이낸 셜, 연합 등	청년희망재단, 고용부·지자체서 공무원 동원해 모 금	고용노동부
14	송OO (더민주)	09.30	한국일보	정부, 비정규직 문제 태도 바뀌라	고용노동부
15	김OO 김OO 외 (더민주)	09.27	조선일보	野, 국감 첫날부터 곳곳서 “최순실” “미르”	고용노동부
16	송OO (더민주)	09.26	헤럴드 경 제	박근혜 정부, 지진 안전예산 95% 삭감	국민안전처

연 번	의원명 (소속정당)	일자	언론사	기사 제목	설명/해명자료 배부 부처
17	진OO (더민주)	10.04	동아일보	화마속 소방관 생명줄 공기충전기 60% 남아	국민안전처
18	백OO (더민주)	09.26	헤럴드 경제	행자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민간에 팔아 12억 벌어	행정자치부
19	권OO (국민의당)	10.04	연 합 , YTN 등	5년여간 음주로 징계 서울시 100명 - 이중 절반이상이 가벼운 징계 처분	서울시
20	권OO (국민의당)	10.04	머니 투 데 이	서울시 방범용 CCTV 범죄발생 설치대수 들쭉날쭉	서울시
21	권OO (국민의당)	10.04	한 겨 레 , 아주경제	서울시 내진설계 안된 교량 95곳, 한남1고가교 등 1 종시설물도 5곳이나 포함	서울시
22	김OO (더민주)	10.03	뉴스1 등	“서울시 과태료 징수율 59% 불과”	서울시
23	김OO (더민주)	10.04	연합, 서 울경제 등	“서울 공원 화장실 절반은 안전벨 없어”	서울시
24	김OO (더민주)	10.04	-	서울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안한 자치구 15개	서울시
25	김OO (더민주)	10.04	연합뉴스	“서울 지진대피소 턱없이 부족…유동인구 2%만 수 용”	서울시
26	소OO (더민주)	09.26	아주경제	“서울시, 인천시 원문정보 공개율 전국 최하위- 전 국 평균치에도 못 미쳐”	서울시
27	소OO (더민주)	10.04	-	서울시 5년간 복지 부정수급액 302억원	서울시
28	소OO (더민주)	10.01	뉴스스	“불나면 어쩌나”, 서울시 지하철 109개 비상대피 시 간 초과	서울시
29	이OO (더민주)	10.04	뉴스1 등	국회 통과 서울시 노후하수관 정비예산 500억 정부, 서울시간 규정해석 논란으로 미집행	서울시
30	이OO (더민주)	10.04	이데일리	성인 발달장애인 평균 돌봄기간 34년, 평생동안 부 담안아야	서울시
31	진OO (더민주)	10.04	헤럴드 경 제 등	서울 한강변 지진에 취약, 한강변 자치구의 내진성 확보 시급	서울시
32	진OO (더민주)	10.03	아 시 아 투 데이. 아 주경제 등	서울시 공무원 비위, 최근 3년간 2.5배 증가	서울시
33	강OO (새누리)	10.04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 취임후 서울시·기관 발주 공사서 24명 사망	서울시
34	강OO (새누리)	10.04	연합뉴스	“서울시 채무 7조 줄었지만 부채는 늘어”	서울시
35	강OO (새누리)	10.03	서울신문	정부 “부적절”에도…서울시 재단 4곳 강행	서울시
36	강OO	10.04	-	시민안전 위협하는 선택 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철	서울시

연 번	의원명 (소속정당)	일자	언론사	기사 제목	설명/해명자료 배부 부처
	(새누리)			회해야	
37	강OO (새누리)	10.03	-	불필요한 논란거리 청년수당! 폐지가 정답!	서울시
38	강OO (새누리)	10.04	-	박원순 시장 재선 이후 해외 출장으로 두 달간 시정 비워	서울시
39	박OO (새누리)	10.04	-	잠실 제2롯데월드를 통해 본 박원순 시장의 무책임·시민단체 중심행정	서울시
40	박OO (새누리)	10.04	-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7조 채무감축 주장은 엉터리	서울시
41	박OO (새누리)	10.04	연합뉴스	박성중 서울시 대기질 예산 박 시장 취임후 감소	서울시
42	이OO (새누리)	10.04	아시아투데이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 진단	서울시
43	이OO (새누리)	10.04	연합뉴스 등	대안 없는 사업추진으로 “서울특별시 교통문제 심각”	서울시
44	이OO (새누리)	10.04	-	『서울특별시-他자치단체간의 대립·갈등관계』 진단	서울시
45	이OO (새누리)	10.04	-	박원순 시장의 『특별시 지방자치·지방행정진로』 진단	서울시
46	이OO (새누리)	10.04	세계일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환풍구 설치 ‘불통·일방 추진’ 문제	서울시
47	이OO (새누리)	10.04	연합뉴스	대단위 SOC사업 추진 지연으로 사업비가 초과지출되고 교향악단 콘서트홀과 같은 문화시설의 단기 사업에만 열중’논란	서울시
48	이OO (새누리)	10.04	뉴스1 등	지진 등 대비, 실효성 있는 재난 방재대책 필요	서울시
49	이OO (새누리)	10.04	아시아투데이 등	『해외관광객 1천만 방문시대’손님맞이 행정』 진단	서울시
50	장OO (새누리)	10.03	파이낸셜뉴스	서울서 최다 싱크홀 발생은‘송파구’	서울시
51	장OO (새누리)	10.03	PBC	서울시 운영 CCTV 36% 권장기준 이하 제품 ‘무용지물’	서울시
52	장OO (새누리)	10.03	연합뉴스	“서울에도 사흘에 한번씩 멧돼지 출몰... 최다는 종료”	서울시
53	장OO (새누리)	10.04	문화, 연합	“청년수당 사업 중앙부처와 협의해야”서울시, 법무법인 자문 무시하고 강행	서울시
54	홍OO (새누리)	10.03	채널A	하루 손님 7명인데“... 한강 수상택시 재운행	서울시
55	황OO (새누리)	10.04	CNB	“서울시 등 광역단체’사후약방문’지진대책”	서울시

연 번	의원명 (소속정당)	일자	언론사	기사 제목	설명/해명자료 배부 부처
56	황○○ (새누리)	10.04	이투데이	투자심사는 왜 하나? '뽕'뚫린 서울시 공투자사업 심사	서울시
57	황○○ (새누리)	10.04	-	서울시 안심벨, 주민도 모르는 한심벨	서울시
58	황○○ (새누리)	10.04	CNBNEWS	"서울시 제작 앱 90% 가량 다운로드 후 삭제...예산 낭비"	서울시
59	황○○ (새누리)	10.04	-	청년실업문제, 단발성 현금지원으로 해결 어려워	서울시
60	황○○ (새누리)	09.29	연합뉴스, 아시아경 제 등	17개 광역시도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74억 원에 달 해	서울시
61	홍○○ (새누리)	10.04	연합	서울시 업무협약 3건 가운데 1건은 이행 안 해	서울시
62	박○○ (더민주)	10.04	뉴스1 등	서울시 공유재산 체납 징수율 10%로 전국 최저	서울시
63	장○○ (국민의당)	10.04	시민일보	'삼청각 무전취식' 용두사미 징계 - J본부장만 면직 처리하고, 나머지는 솜방망이 처 별-	서울시
64	이○○ (국민의당)	10.04	아시아경 제	서울시 소방헬기 도입 특정업체 지명 입찰 의혹	서울시

3 맺는 말

- 이상에서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에 대해 지적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과장된 사례를 살펴보았음. 이는 짧은 국감 기간 동안 다수의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현재 국감 제도에 근원적인 문제점에 기인함. 따라서 1년 중 정기 국회 기간 동안 잠깐 열리는 '이벤트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연중 실시하는 상시 국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함.